

한국농촌경제연구원 뉴스

2006년 12월

“한국 농업·농촌, 밝은 미래를 연다”

농업전망 2007, 1월 24일 잠실 롯데호텔에서 개최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는 ‘농업전망 2007 발표대회’를 2007년 1월 24일(수) 9시부터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에서 개최한다.

이번 ‘농업전망 2007년 발표대회’ 주제는 ‘한국 농업·농촌, 밝은 미래를 연다’이다. 1998년부터 열여섯 번 열린 농업전망 발표대회는 2007년에 10회를 맞아 국내 및 해외 저명인사를 초청, 기초연설을 하여 국내경제와 세계 농업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FTA 등 주요현안 진단, 전망

전망대회 1부는 ‘농업환경의 변화’란 주제로 열어, 한국개발연구원(KDI) 현정택 원장이 ‘한국 경제 전망과 농업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캐나다 브리티시 컬럼비아대학교(UBC) 리차드 바리켈로 교수가 ‘세계 농업·농정 동향과 전망’이란 제목으로 각각 기초연설을 한다. 또한 2007년 농업 및 농가의 경제전망에 대해서도 발표한다.

제2부는 ‘소비자 지향형 농업과 농촌복지’란 주제 하에 4세션으로 나뉘어 연다. 1세션은 도하개발어젠다(DDA), 자유무역협정(FTA) 동향과 전망, 북한 핵실험이 남북한 농업에 미치는 영향을 주요 내용으로 발표한다. 2세션은 농림기술 개발의 동향과 농식품 신시장의 개발전략, 전통식품 시장 활성화 방안, 바이오에너지 산업의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3세션은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 농촌관광, 농촌 국제결혼 실태와 정착지원 방안, 농업인 노후대비 소득보장대책에 대해 발표한다. 4세션은 미국과 일본, 중국, 유럽의 농업 농정 동향에 대해 발표해 우리나라

와 관련된 주요국의 최근 농업과 농정에 대해 알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될 것이다.

주요국 농정과 산업별 전망도 발표

제3부는 ‘산업별 전망’이란 주제 하에 3세션으로 나뉘어 열린다. 1세션은 쌀 수급 동향과 전망, 한육우, 낙농, 양돈, 양계의 수급 동향과 전망, 육류 이력추적제의 도입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2세션은 채소류와 과일류 수급 동향과 전망, 미국의 과일산업, 임산물 수급 동향과 전망에 대해 발표한다. 3세션은 과채류와 화훼류의 수급 동향과 전망, 시설채소의 수출전략, 인삼산업과 기능성식품의 개발방안에 대해 발표한다.

‘농업전망 2007 발표대회’에 참가를 원하면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에 등록방법과 일정이 게시되어 있다.

원장, 정책기획위원회 위촉

최정섭(崔正燮) 원장은 11월 27일자로 대통령정책자문기구인 정책기획위원회 경제분과 위원으로 위촉되어 2년간 활동한다.

정책기획위원회는 1984년에 출범, 국가의 중장기 발전 전략 및 정책 방향 수립과 국가 주요 정책의 연구·평가 등 국정 의 흐름에 대해 대통령께 자문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기구이다.

AI 발생 현장, 익산 방문

최정섭 원장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 현황을 파악하고자 12월 5일 익산시청을 방문했다.

시청 상황실에서 임승구 자치행정국장이 AI 발생 상황 및 살처분 현황과 정부보상 등에 대해 원장에게 브리핑했다. 최 원장은 경제지역에 위치한 초소를 방문하여 관련 직원들을 격려했다.

중국 농업부정보중심과 MOU 체결



최정섭 원장은 중국 농업부정보중심 귀쥘위(郭作玉) 부주임과 연구협력 강화

를 위해 12월 4일 연구원에서 연구협력협정(MOU)을 체결했다.

양기관은 MOU 체결을 계기로 향후 농산물 가격, 반입량 정보 및 농업통계정보를 상호교환하기로 하였다. 또한, 연구인력의 교류를 강화하고, 공동 관심 분야의 연구 협력사업도 다양하게 추진하기로 합의했다.

새국토연구협의회 2006년 성과발표회 개최



새국토연구협의회는 12월 6일 올해를 결산하는 성과발표회를 연구원에서 개최했다.

새국토연구협의회(상임대표 최정섭)는 12월 6일 연구원 대회의실에서 올해를 결산하는 성과발표회를 가졌다.

개회식에서 최정섭 상임대표는 “올해는 내실을 다지는 데 주력했다”고 말하며, “정부가 추진한 ‘살기 좋은 국토 만들기’를 새국토연구협의회에서 반추해 보는 계기가 되었다”고 밝혔다.

새국토연구협의회는 우리 연구원을 비롯 시민단체, 학계, 관련 연구원 등 21개 단체가 참여한 네트워크로 올해 ‘살기 좋은 국토만들기’란 주제로 포럼을 개최하는 등 각종 연구결과를 발표하였다.

올해 새국토연구협의회는 8월 25일 강원도 화천군청에서 ‘도·농이 함께 만드는 살고 싶은 농촌’이란 주제로 1차 포럼을 개최했다. 포럼에서 우리 연구원 송미령 연구위원과 성주인 전문연구원이 ‘살기 좋은 농촌만들기를 위한 관련 주제간 역할 정립’이란 제목으로 발표하는 등 4편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2차 포럼은 9월 27일 청주 고인쇄박물관에서 ‘함께 만드는, 아름답고 쾌적한 지역환경’이란 주제로 개최, 주민과 함께 하는 청주 만들기, 부산 100만평 시민공원만들기 등의 사례 발표가 있었다.

제주대학교에서 10월 25일 3차 포럼을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이젠 액션이다’라는 주제로 개최해 참여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와 한국형 살기 좋은 지역만들기 등의 주제발표와 토론이 있었다.

새국토연구협의회는 올해 발표된 논문과 자료를 한 데 묶어 ‘살고 싶은 국토’ 시리즈 1호를 발간했다. 차기 상임대표진은 박헌주 주택도시연구원장, 강병기 도

자연대 대표, 이정재 농촌계획학회 회장으로 구성되어 활동하게 되었다.

베트남, 농촌개발 방법론 연수

연구원 국제농촌개발팀은 12월 18일부터 5일간 베트남 현지에서 농촌지역개발 방법론에 관한 연수사업을 실시했다.

베트남 국립농업발전계획연구소(NIAPP)와 공동으로 실시한 이번 연수사업에는 베트남 농림부와 국립농업발전계획연구소의 농촌지역개발 담당자와 박장성, 탕화성, 권통성 등 3개성의 농촌개발 담당자, 시범사업이 실시될 지역의 지도자 등 24명이 참석했다.

연구원의 정기환 선임연구위원, 허장 연구위원, 박경철 전문연구원은 이번 연수회에서 지역사회 분석, 개발 수요 파악, 계획 수립, 사업 관리 및 평가 기법 등에 대해 새마을운동 방법론에 기초하여 강의했다.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자 오준호 박사 초청 강의



12월 월례초회에 오준호 박사를 초청, 휴머노이드 로봇 개발 관련 강의를 들었다.

하며, “30년사를 만드는 과정에서 직원들이 지나온 길을 돌아보고, 향후 30년을 준비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KAIST 오준호 교수는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개요’란 제목의 특강을 통해, 한국최초의 인간형 로

연구원은 12월 1일 대회의실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 오준호 기계공학과 교수를 초청, ‘한국의 휴머노이드 로봇의 개발 개요’란 제목으로 특별강연을 했다.

최정섭 원장은 특강에 앞서 북한 핵 문제와 조류인플루엔자 등 현안에 대한 소견을 밝히고, 최근 돌아본 뉴질랜드의 1984년 농정개혁에 대해 소개했다. 원장은 “오는 2008년, 연구원 출범 30주년을 맞아 각종 행사를 준비하고 있다”고 말

봇 ‘휴보(HUBO)’를 만든 과정을 단계별로 진술하게 밝혔다. 오 교수는 “일본 혼다가 15년 동안 3000억원의 비용을 들여 ‘아시모(ASIMO)’를 만든데 비해, 3년간 6억원의 비용을 들여 순수 국내 기술로 ‘휴보’를 만들었다”고 소개하며, “이 같은 동력은 소규모 개인 연구팀이었기에 가능했다”고 밝혔다. 강의를 마치며 “늘 재미있게 자기가 맡은 일과 연구를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했다.

농업전망 2007 발표대회

- 주 제: 한국 농업 · 농촌, 밝은 미래를 연다
- 일 시: 2007년 1월 24일(수) 9:00~20:00
- 장 소: 잠실 롯데호텔 크리스탈볼룸(잠실 소재)
- 접수 및 안내: 연구원 홈페이지(www.krei.re.kr)



2006 농업의 회고와 과제

오 내 원 선임연구위원

병술년 한해도 저물어 가고 있다. '부동산 광풍'이라고 불리울 정도로 가파른 집값 상승과 사행성 게임 '바다 이야기'를 둘러싼 비리의혹은 정부 신뢰에 상처를 주었고, 북한의 핵실험 강행은 한반도 위기와 이념논쟁을 증폭시켰다. 반면 반기문 전 외교통상부 장관의 유엔 사무총장 취임, 순 국내산인 피겨 스케이터 김연아 선수의 세계 시니어무대 평정, 수영 박태환 선수의 아시안게임 3관왕 성취는 한국사회 성장의 단면을 유감없이 보여 주었다.

시장개방과 식품안전성이 화두

농업계의 올해 최대의 관심사는 '시장개방'이었다. 금년 2월에 시작된 한·미 자유무역협정(FTA)은 쇠고기, 낙농품, 감귤 등 경쟁력이 취약한 분야의 피해 우려 속에 내내 뜨거운 논쟁과 갈등의 한가운데 있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와 안전성 문제, 수입농산물의 불법 유통과 원산지 표시 문제, 의무수입물량(MMA) 쌀 시판과 추곡수매제의 전환에 따른 수급안정 문제도 진행 중이다.

식품안전성은 여전히 중요한 화두이다. 단체급식에서 잇따라 발생한 식중독 사건은 식품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환기시켰다. 최근의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 재발은 양계농가에 큰 어려움을 주고 있지만 현 가축사양시스템의 지속성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도 제기하였다. 한편 식품안전관리 기능을 통합한 '식품안전처' 설립을 두고 농업계의 우려가 높았다. 식품안전은 생산 단계부터 체계적으로 관리되어야 하며 산업적 육성과 불가분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

농가소득 안정도 자주 거론된 관심사였다. 양정전환에 따른 산지 쌀값의 불안, 중국산 김치 수입 급증으로 인한 배추값 폭락, 올해도 반복된 서해안 설해와 강원

도 지역의 태풍·폭풍 피해는 많은 농가를 시름에 젖게 했다. 작물보험과 자조금 사업이 확대되고 있고, 재해피해에 대한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지만 농가의 경영안정을 이루기에는 역부족이다.

금년에는 저출산과 고령화가 사회발전의 제약요인으로 본격 제기되었다. 2005년 인구주택총조사 결과, 전국 인구의 9.3%가 65세 이상의 노령인구이고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른 것으로 나타났다. 농촌의 노인 비중은 평균의 두 배인 18.6%에 달해 초고령사회를 향하고 있다. 이미 80년대부터 농촌에 '아이 울음소리가 그쳤다'는 경종이 울렸지만, 미래의 농산업과 지역사회를 이끌어갈 젊은 층의 확보는 우리에게 주어진 가장 어려운 과제이다.

농업과 농정의 방향전환 필요

지난 일년간 우리가 부딪친 이러한 문제들은 일일십년 전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으며, 농업인과 정부는 산적한 문제 해결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다. 경쟁력 향상을 위한 영농규모 확대, 농산물의 품질과 안전성 제고, 전문인력 양성에 많은 투자를 하고 제도를 개편하였다. 소득문제 해결을 위해서 농촌관광과 농공단지 개발에 힘쓰고, 다양한 형태의 직접지불제를 도입하였다. 이같은 노력에도 여전히 문제는 현재진행형이다.

우리 농업의 경쟁력은 아직 취약하고 도농간 소득과 생활격차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소비자의 높은 선호는 농식품 안전성에 대한 깊은 우려를 반영하고 있다. 이 문제들을 해결하지 않고서는 농업의 미래를 이야기하기 어려운데, 주어진 시간은 많지 않다. 몇 년 후면 쌀 관세화 등 큰 폭의 개방이 예정되어 있고, 중국의 급속한 농업발전은 우리 농업을 위협하고 있다.

지금 국내외 상황은 우리 농업과 농정

에 근본적인 방향 전환을 요구하고 있다. 세계화에 따른 시장개방과 소비자권리의 강화는 거스를 수 없는 흐름이다. 국제협상에서는 무역장벽 뿐만 아니라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국내정책까지 규율하고 있다. 이제 농업과 정책은 보다 시장지향적으로 전환할 수밖에 없다.

소비자 지향형, 맞춤형 농정으로

이를 위해서는 먼저 농업인의 의식과 정책의 원칙이 소비자 지향적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현재 농식품의 안전관리는 차별화를 통한 소득제고의 수단으로 인식되고 있지만, 곧 농업 생존의 전제조건이 될 것이다. 농식품 생산·유통 시스템에 대한 신뢰는 소비자의 농산물 선택에 영향을 미칠 뿐만 아니라 농업지원정책에 대해 납세자로서 동의할 수 있는 기반이 되기 때문이다.

농업을 시장지향적으로 바꾼다고 해서 모든 것을 시장에 맡길 수는 없다. 환경과 전통문화 보전과 같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적절한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한 지원, 급격한 개방확대로 받게 되는 충격을 완화하기 위한 소득지원에 대해서는 사회적 공감을 바탕으로 제도화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나아가, 시장에서 해결되기 어려운 경영위험에 대처하기 위한 소득안정방안도 강구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정책 추진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산업으로서의 농업에 대한 정책은 경쟁력 있는 농가와 품목에 집중되어야 한다. 머지않아 은퇴할 노령농업인에 대해서는 농업소득 지원보다는 역모기지론, 은퇴수당 등 노후소득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농림부는 이러한 취지에서 '맞춤형 농정'을 준비하고 있는데, 농가의 경영능력을 파악할 수 있는 농가등록제와 연계 하되, 개인 농가뿐 아니라 법인경영체를 염두에 두고 운용하여야 할 것이다. **R**



농촌사회의 양극화 완화·해소를 위한 정책과제

박 대 식 연구위원

양극화란 사회의 여러 측면에서 중간 부분이 해체되면서 양극단 부문이 확대되고 부문간 이동이 단절되거나 이동이 더 어려워지는 현상을 말한다. 양극화는 지니계수와 소득분배율 등과 같은 기존의 불평등 지표로는 제대로 설명할 수 없으며 새로운 지표와 분석을 필요로 하는 개념이다.

양극화 완화·해소는 긴급 국가과제

기존의 불평등 지표들은 전체 평균에 대한 각 계층 간의 차이만을 반영하며, 특정 계층의 해체나 밀집 정도는 설명하지 못한다. 우리나라에서 양극화가 특히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그 속도가 매우 빠르고, 선진 외국에서는 장기간에 걸쳐서 개별적으로 나타나는 양극화의 여러 측면이 압축적으로 동시에 나타나고 있다는 점이다.

양극화가 심화되면, 사회갈등이 심화되고, 사회적 자본의 축적이 어려워지며, 내수가 침체되어 사회통합과 경제성장의 동력이 크게 흔들리게 된다. 즉, 국민적 갈등과 분열의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는 양극화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사회의 통합이 불가능하게 되고 지속적인 경제성장에도 큰 걸림돌이 된다. 이에 양극화의 완화와 해소는 시급하게 해결해야 하는 국가적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

최근 양극화 관련 논의는 경제활동이나 소득 중심으로만 이루어지고 있어서 양극화 문제를 좀 더 다차원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다. 더구나 양극화 관련 선행연구들은 전국 단위나 산업부문 또는 도·농간 비교 중심으로 이루어져서 농촌사회 내부의 양극화 실태는 제대로 파악하지 못했다. 농업·농촌의 양극화 관련 선행연구들도 농가 중심의 경제적 측면에서 양극화 문제를 다루었기 때문에 양극화의 사회적 측면에 대해서는 체

계적으로 연구하지 못했다.

통계청의 「사회통계조사」의 최근 10년간의 자료에 대한 심층 분석과 농촌주민(5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면접 설문조사 결과 등에 따르면, 농촌사회는 대체로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으나 양극화 부문별로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즉, 소득, 고용, 건강, 주거, 사회참여 부문의 양극화는 점차 심화되고 있지만, 교육부문은 최근에 다소 완화되고 있다.

농촌주민의 양극화에 대한 인식을 부문 간에 비교한 결과 소득에 대하여 전체 응답자의 69.2%가 양극화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고용에 대하여는 65.8%, 주거는 58.0%, 교육은 50.8%, 사회참여는 49.8%, 건강은 46.8%가 양극화 되어 있다고 응답하였다. 그리고 농촌 권역별로 주민들의 양극화 인식에 차이가 있었는데, 「도시 인접지역」이 양극화 인식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양극화 심화 추세, 부문별 차이있어

우리나라의 양극화 완화·해소 관련 정책을 살펴보면, ① 양극화 현상에 대한 대응방향에 있어서 정책적 혼선이 많고, ② 소득분배구조 악화에 대한 종합적 대응기반이 미흡하고, ③ 경제·산업정책과 노동·복지정책간의 유기적 결합이 부족하며, ④ 일자리 창출의 양적인 측면에 편향되어 질적인 측면이 소홀히 다루어지고 있으며, ⑤ 사회보험 사각지대 해소 및 차상위계층에 대한 대책이 부족하며, ⑥ 농업·농촌에 특화된 정책이 별로 없음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농촌사회의 양극화를 완화·해소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정책과제를 해결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첫째, 소득이나 고용과 같은 경제적 측면의 대책과 교육, 건강, 주거, 사회참여 등을 고려하는 다차원적인 접근이 필

요하다. 양극화의 정도는 각 부문별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공통적인 접근뿐 아니라 부문별로 특화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다차원적 양극화 해소 위한 접근 필요

둘째, 농촌의 권역을 고려하는 차별화된 정책을 개발할 필요가 있다. 농촌주민 대상 면접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각 부문별 양극화에 대한 인식 정도는 「산간·해안지역」, 「도시 인접지역」, 「중산간 농업지역」, 「평야 농업중심지역」에 따라서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도시 인접지역」은 양극화에 대한 인식 정도가 다른 권역보다 일반적으로 더 높았다. 그리고 양극화의 주된 원인 및 양극화 완화를 위해서 필요한 정책에 대한 의견에 있어서도 권역별로 상당한 차이가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셋째, 사후 지원을 통한 문제 완화뿐만 아니라 사전 예방적 문제소지 완화 노력도 중요하다. 사전 예방적 노력이 사후 지원보다 효율적임을 명심해야 한다.

넷째, 빈곤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안전망을 강화해야 한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가구 유형별 특수욕구를 반영할 수 있게 해야 하며,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각종 부가급여와의 관계 설정 및 기능분담 등을 통해 공공부조제도를 더욱 체계화하고 확충해 나갈 필요가 있다. 그리고 차상위계층의 자활기회 확대, 빈곤층의 기초생활보장이 필요하다.

끝으로, 양극화 해소를 위한 중장기 경제사회정책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실천해야 한다. 관련 정책 전반의 일관성과 내실을 기할 수 있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국가실천계획이 필요하고, 경제정책, 노동정책, 복지정책의 연계를 강화해야 한다. R



온실가스 의무감축, 농업부문 기회로 활용해야

김 창 길 연구위원

18세기 산업혁명 이후 인간의 경제활동이 대량생산과 대량소비의 형태로 바뀌면서 이산화탄소와 메탄 등 온실가스 배출이 크게 증가하였다. 특히 1980년대 들어 대기 중에 존재하는 온실가스 농도가 증가하고, 기상이변이 세계 곳곳에서 발생하면서 지구온난화현상은 국제사회의 이슈가 되었다.

기후변화에 관한 정부간협의체(IPCC)의 지구온난화 연구결과에 따르면 지구의 평균기온이 지난 1세기 동안 0.6℃ 상승했고, 2100년에는 1990년 대비 1.5~5.8℃ 상승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IPCC의 조사결과 발표 후 기후변화 문제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국제적인 협력이 필수적이라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1992년 6월 브라질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온실가스에 의한 지구온난화 현상을 방지할 목적으로 기후변화협약이 채택되었다.

2013년부터 온실가스 의무감축 불가피

기후변화협약은 12차례에 걸친 당사국 총회를 통해서 점차 구체화되었다. 특히 1997년 일본 교토에서 개최된 제3차 당사국총회에서 기후변화협약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선진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주요 내용으로 하는 교토의정서가 채택되었다. 2005년 2월 16일 러시아의 비준으로 교토의정서가 공식적으로 발효되었다.

이에 따라 선진국의 경우 제1차 공약기간(2008~2012년)에 전체 온실가스 배출량을 1990년 대비 평균 5.2% 감축하되, 각국의 경제적 여건에 따라 최대 8%까지 차별화된 감축량을 규정하고 있다. 한국은 교토의정서에 비준은 했지만 1997년 발효당시 외환위기에 따른 국가경제의 어려움을 인정받아 1차 공약기간에는 온실가스 의무감축을 면제 받았다. 다행히

단기적인 국가차원의 부담은 피했지만 그렇다고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다. 한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2004년 현재 세계 10위를 차지하고 있다. 그리고 OECD회원국이기에 때문에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 이후에는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국제적인 공조체제 구축은 피할 수 없는 대세이다.

온실가스 의무감축, 위기와 기회로 작용

온실가스 발생은 대부분의 산업부문 활동과 직간접으로 연계되어 있어 온실가스 의무감축이 실제로 이행되면 농업부문에도 직간접으로 영향을 미치게 될 전망이다. 특히 농업부문은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는 긍정적 측면과 온실가스 배출을 증가시키는 부정적 측면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 앞으로 교토의정서에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 농업부문의 위기로 작용할 수도 있고 기회로 활용할 수도 있을 것이다.

교토의정서에 따른 농업부문의 파급영향은 국가별 온실가스 의무감축의 목표량이 어떻게 설정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2차 공약기간이 시작되는 2013년부터 기준시점(2000년 배출량 기준) 배출량 대비 5%의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를 상정, 농업과 관련 산업부문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몇 가지 시사점이 도출되었다.

첫째, 벼 부문을 비롯한 경종부문은 2013년 이후 온실가스 배출 수준이 배출허용량 이하로 감소하면서 잉여배출량이 발생하게 되어 배출권을 판매할 수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대가를 인정받기 위한 대응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한편 축산부문은 온실가스 감축의무가 수반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산업에 비해 매우 높은 저감비용이 발생하여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기술개발과 배출권 확보 등 체계적

인 전략이 마련되어야 한다.

둘째, 농업부문에 존재하는 온실가스 잉여배출은 배출권 거래가격과 거시경제적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미치기 때문에 농업부문과 같이 잉여배출량을 가진 산업을 배출권거래제에 참여시키는 것이 국가 경제에 더 유리하다. 즉 농업부문의 배출권거래제 참여는 전 산업부문의 배출권 거래가격을 하락시켜 비농업 부문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됨으로써 향후 이에 대한 보상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 배출권거래제 적극 활용해야

셋째, 기후변화협약은 농업부문에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여 농업소득에 기여하고 타산업부문의 온실가스 감축에 따른 압박도 완화시켜 줄 수 있어 기후정책수단(배출권거래제, 탄소세 등)과 농업정책과의 연계가 이루어져야 한다. 2007년부터 우리나라도 배출권 시범거래가 시작될 예정이어서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에서 농업부문이 실질적으로 유리한 위치를 확보할 수 있도록 체계적이고 설득력 있는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내년부터 교토의정서 2차 공약기간에 우리나라가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에 동참하는 문제에 대한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면, 각 산업부문별로 이해득실에 따른 대응책 마련에 부심하게 될 것이다. 농업부문도 온실가스 의무감축 이행에 따른 여건 변화를 신속히 전망하고 대처한다면 이를 기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농업부문에서 온실가스의 의무감축 관련 이슈는 아직 낯설고도 생소한 문제로 여겨지고 있다. 코앞에 닥친 문제가 아니라는 이유로 온실가스 감축에 큰 관심을 갖지 않을 때 농업부문이 받을 수 있는 적절한 보상과 호기를 놓쳐 버릴 수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R**

한·미 FTA 농업 분과 5차 협상 평가와 향후 전망

권 오 복 연구위원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은 지난 12월 4일부터 7일까지 미국 몬태나에서 열린 5차를 마지막으로 금년을 마감하고, 내년 1월 15일부터 우리나라에서 열린 6차 협상을 기약하였다. 5차 협상에서도 이전 협상과 마찬가지로 이렇다할 합의 사항이 없이 양측의 입장을 확인하는 정도였다.

6차 협상부터 핵심쟁점에 대한 논의가 본격적으로 이뤄질 전망이다. 5차 협상까지의 농업분과 주요 쟁점과 성과를 짚어 보고 앞으로의 협상을 전망해 보기로 한다.

기본협정문의 큰 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의견 접근 이뤄

기본협정문에 담길 내용 중에는 저율관세할당(Tariff Rate Quota: TRQ) 관리방식과 농산물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 SG)가 주요 쟁점이었다. 미국은 우리나라에게 좀더 투명한 방식으로 TRQ 물량을 관리해야 된다고 주장하면서, TRQ 물량에 대한 국영무역 및 수입부과금(mark-up) 금지, TRQ 물량의 선착순 배분, 용도제한 철폐 등의 조항을 기본협정문안에 담기를 원했다.

우리나라는 저렴한 수입농산물이 국내 농산물에 대해 미칠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품목에 따라 수입부과금이 나 국영무역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었다. 3차 협상까지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다가 기본협정문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벌인 4차 협상을 계기로 TRQ 관리 방식을 기본협정문에 포함시키기 양측의 의견이 모아졌다. 하지만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이견이 있어서 의견 절충이 필요하다.

우리나라는 한-미 FTA에서 SG를 도입할 것을 주장했다. 우리나라는 고율 관세 품목이나 축산물, 과일, 채소 등과 같이 관세철폐 충격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을 중심으로 관세 인하 또는 철폐에 따른 충격을 완화시키는 안전장치로서 SG를 반드시 도입해야 된다는 입장을 견지했다.

미국은 이에 대해 3차 협상까지는 부정적인 입장이었지만 4차부터 우리나라가 주요 품목을 개방하는 것을 전제로 SG 적용에 반대하지 않는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우리나라 주요 농산물의 시장 개방을 이끌어내려는 미국의 협상 전략이 아닌가 싶다. 그러나 양측의 양허안이 확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적용 대상 품목, 발동 기준, 추가적인 관세 부과 등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상태이다.

주요 품목의 양허 폭 결정이 향후 협상의 주요 과제

향후 협상에서 중요한 과제는 양허 폭의 결정이다. 이것은 관세를 몇 년에 걸쳐 어느 정도나 인하 또는 철폐할 것인가, 또는 개방에서 예외로 할 것인가 등의 문제이다. 2차 협상에서 미국은 일반 상품들은 물론 농산물까지도 즉시 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기타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양허안을 작성하지는 입장을 제시했다. 실제로 미국이 우리 측에게 제시한 미국의 농산물 양허안을 보면 모든 품목에 대한 관세를 10년내에 철폐하겠다고 규정하고 있다. 반면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농업분과에서 선택한 양허방식은 즉시 관세 철폐, 2년내 철폐, 3년내 철폐, 5년내 철폐, 7년내 철폐, 10년내 철폐, 15년내 철폐, 미정(undefined) 등 8가지 유형이다.

미정으로 분류된 품목은 세계무역기구(WTO)에서 10년간 관세화유예조치를 받은 쌀을 비롯해서 국내 농업 생산액 및 부가가치 총액에서 비중이 높은 품목으로서 관세 철폐 시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품목 등이 포함된다. 미국 측은 우리나라가 미정으로 분류한 품목의 구체적인 개방계획을 밝히라고 요구하고 있다. 따라서 앞으로 협상이 진행되면 미정으로 분류된 이들 품목의 개방계획도 좀더 구체화될 것이다.

양측은 4차 협상까지 일부 사료곡물과 가공식품 등 민감도가 상대적으로 낮은 품목을 중심으로 협상을 진행해서 의견 접근을 어느 정도 이뤘지만 핵심 민감품목에 대한 논의는 부진한 실정이다. 이번 5차 협상에서도 주요 핵심 품목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보다는 그동안의 합의 사항을 재확인하고, 주요 품목의 민감도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는 정도였다. 따라서 앞으로 농업분과 협상의 주요 과제는 우리나라 양허안에서 미정으로 분류된 품목을 중심으로 양측이 적절한 합의를 이끌어 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국익의 극대화’ 라는 FTA 목적 지켜져야

농업분과에서 지금까지의 논의가 주로 나무의 ‘가지’에 대한 것이었다면, 실무급을 포함한 일련의 앞으로의 협상에서는 ‘몸통’에 대한 논의에 초점이 맞춰질 것이다. 따라서 우리나라 농산물 양허안에서 미정으로 분류된 품목의 개방 수준을 놓고 양측의 팽팽한 공방이 예상된다. 당초 협상일정상으로는 내년 6월말로 시한이 만료되는 미국의 무역촉진권(TPA)을 고려해서 내년 3월까지 협상을 종결한다는 계획이었는데 지금으로서는 갈 길이 멀어 보인다.

별써 일부에서는 고위급 회의에서 ‘주고 받기식’ 협상을 조심스레 점치기도 하고, 협상 시한에 쫓길 가능성을 염려하기도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에서도 ‘국가 이익의 극대화’ 라는 FTA 목적 내지 원칙이 지켜져야 할 것이다. 국익을 극대화하는 FTA가 되게 하기 위해서는 FTA 협상에서 농업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하여 농업에 대한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해야 한다. 우리 농업이 감내할 수 있는 적정 수준의 FTA를 모색하는 데 모두의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R**

2006년 세계농업 회고

김 태 곤 연구위원

2006년 세계 농업에 몇 가지 이변이 일어났다. 우선 도하개발 어젠다(DDA) 협상 중단은 비롯하여, 호주의 한발에 의한 곡물생산 감소와 미국의 바이오 에탄올 수요 증가 등에 의한 세계 곡물 가격 폭등, 그리고 WTO 가입한지 5년 된 중국이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전락한 것 등이 중요한 사건이다.

DDA 협상은 미국·호주, EU·일본, 브라질·인도 등 주요 6개국(G6)이 지난 7월말 협상중단을 결정하였다. 미국의 국내보조, EU·일본 등의 시장접근, 개도국의 비농산물 시장접근(NAMA)을 둘러싸고 3편으로 나누어져 사생결단 협상을 벌였으나 합의에 실패하였다. 앞으로의 관심사항은 '언제 협상을 재개하여 타결하느냐'이다.

협상 재개에 대해서는 세 가지 시나리오가 있다. 하나는 2007년 봄 재개하여 연말 타결이라는 낙관적인 견해이고, 다른 하나는 미국에서 신청권이 들어서는 2009년 봄에 시작하여 2010년 타결, 2012년 이행이라는 비관적인 견해가 있다. 현재로서는 후자의 가능성이 높다.

DDA 협상중단에 따른 지역주의 대두

협상 재개를 위해서는 각국이 얼마나 양보하느냐 하는 정치적 결단이 필요하다. 만약 미국이 2007년 중에 농업법을 제정하여 국내보조 감축의 여지를 만들어 둔다면 조기타결의 가능성도 남아있다.

DDA 협상이 장기화되면 세계 통상정책의 중심은 다자주의에서 자유무역협정(FTA)과 같은 보호색이 짙은 지역주의로 전환된다. 지금까지의 FTA는 WTO를 보완하는 의미였지만 앞으로는 WTO를 대체하는 의미를 가질 수도 있다. 이렇게 되면 DDA 협상은 추진력을 상실하여 핵심문제는 남겨둔 채 개도국의 개발 지원이나 무역원활화 등 일부 문제만 합의하여 종결하는 것도 예상할 수 있다. 이것은 최악의 시나리오다.

금년 들어 두 번째 이변은 세계 곡물의 수급균형이 무너지고 있다는 점이다. 곡물은 세계적인 수요 증가와 함께 석유가격 상승에 따른 대체 연료 등 용도의 다양화에 따른 수급 불균형이나 타나 각국의 식량 쟁탈전이 확산되고 있다.

예년 같으면 신곡이 생산되는 가을이면 가격이 하락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올해는 상승하고 있다. 과거 20년간을 뒤돌아보면 1995년에 한 번 이러한 현상이 있었다. 1995년 가을은 흉작에 의한 공급부족이 원인이었지만, 2006년은 소비확대에 의한 수급 긴박이 가세하고 있다.

호주 농업자원경제연구소(ABARE)가 12월 5일 발표한 전망에 의하면, 2006/07년도 겨울곡물 생산량은 한발 영향으로 전년대

비 62%나 감소한 1,550만톤에 그친다. 지난 10년간 최저였던 1994/95년도 한발 이후 최저 수준이다. 이 중에서 소맥은 전년도 2,509만톤에서 974만톤으로 61%나 감소한다. 한발이 장기화함에 따라 쌀 식부면적도 감소하여 생산량은 88% 감소한 12만 6,000톤 정도이다. 호주 외에 EU와 러시아에서도 소맥 감산을 전망하고 있다.

미국, 바이오 에너지용 옥수수 수요 대폭 확대

생산 제약 속에서 미국을 비롯한 EU, 브라질, 중국 등에서 바이오에너지의 소비 확대에 따른 에너지용 곡물소비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미국은 2005년 에너지정책법을 제정, 대체에너지 사용을 의무화하고 있다.

2006년 40억 갤런, 2012년 75억 갤런의 대체에너지가 필요하다. 옥수수 1부셀에서 에탄올 2.8갤런이 생산된다. 75억 갤런 전부를 에탄올로 충당한다면 27억 부셀의 옥수수 추가 수요가 발생한다.

12월 21일 미국 시카고 시장의 옥수수 가격은 부셀당 3.78달러까지 상승하는 등 10년만에 고가를 기록하고 있다. 세계 곡물은 소맥의 감산이 계기가 되어서 옥수수의 가격 상승을 가져왔고, 그것이 대두에 파급하는 연쇄 가격 상승이 일어나고 있는 실정이다.

중국, WTO 가입후 농산물 순수입국으로 전락

한편, 중국에서도 예상치 못한 사태가 발생하고 있다. 중국은 WTO에 가입한지 지난 12월 11일자로 5년이 지났다. 그 동안 무역액은 3배, 무역수지는 7배로 확대되는 등 세계 3위의 무역대국으로 성장하였다. 그러나 농업부문은 도농간 소득격차 확대를 비롯하여, 농산물 순수입국화, 곡물의 대량 수입 등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중국은 2000년도 44.4억 달러의 농산물 무역흑자를 기록하였다. 그러나 2004년부터 적자로 전환, 2005년은 11.4억 달러의 적자에서 2006년 상반기 이미 20.1억 달러의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 중국은 국내의 왕성한 수요를 충당하기 위해 세계 각지에서 농업자원을 끌어 모으는 진공소제기이다.

2006년에 일어난 세계 농업의 대형 사건들은 2007년으로 이어진다. DDA 협상중단에 따른 지역주의 대두, 세계 곡물시장에서의 수급 불균형과 가격 폭등 지속, 그리고 세계 농산물시장에서 중국의 교란요인 등은 계속 잠복하고 있다. 이에 대한 동향 파악과 대응책 마련에 관심을 가져야 할 때이다. **R**

고객관계관리시스템 참여우수고객 포상



연구원은 6월부터 고객관계관리(CRM)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고 있다.

연구원은 지난 6월 고객관계관리(CRM) 시스템 구축이후 발송된 총 35회의 온라인정보와 설문에 참여 실적이 높은 15명의 'CRM 참여우수고객'을 선정하여 온라인상품권을 지급했다.

2007년부터는 연간 4차례에 걸쳐 CRM 참여우수고객을 선정해 포상할 예정에 있는 등 고객참여 인센티브를 확대할 계획이다.

이 시스템은 현재 2만 5천여명에 달하는 일반고객(홈페이지 회원)과 정책고객(연구사업 관련인 및 보고서 회원 등)에게 연구원 이메일 소식지(KREI i-zine), 농정연구속보, 행사알림 등 각종 다양한 정보를 웹진형태로 제작해 발송하고 있다.

지난 7월 이후 9차례에 걸쳐 고객 모니터링을 실시했는데, 성과확산 반응과 선호조사를 CRM을 통한 온라인 설문조사와 우편, 면접, 엽서조사 등 다양한 방식을 적용했다.

CRM은 이러한 다양한 발송매체별·컨텐츠별 고객관심도와 개인별 참여이력을 통계자료, 그래프 등으로 한 눈에 확인할 수 있어 고객중심의 정보제공과 맞춤형 정보를 생산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한농연 제천시연합회 내원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 제천시연합회(연합회장 안경모) 회원 20여명이 12월 4일 우리 연구원을 방문했다.

최정섭 원장은 한농연 회원의 연구원 방문을 환영하며, "연구원도 우리 농업과 농촌의 발전을 위해 더욱 노력하겠다"고

설명해 한·미 FTA 등 현안을 중심으로 한 농연 회원들과 의견을 나눴다.

연구원 내방객

△중국인민대학 김홍운 교수가 12월 4일 연구원을 방문해 정기환 선임연구위원과 김태곤 연구위원을 만나 농촌개발에 대한 의견을 나눴다.

연구원 동정

△이동필 선임연구위원은 12월 7일 농협 중앙회에서 열린 제4회 인삼산업발전 세미나에서 '세계 인삼산업의 변화 추세와 대응과제'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창길 연구위원은 12월 15일 마사회에서 열린 제3회 친환경농업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을 받았다. 김창길 연구위원과 김태영 연구원은 12월 21일 한국식품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교토의정서에 따른 온실가스의 의무감축 이행의 농업 부문 파급 영향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경필 부연구위원은 12월 7일 연구원에서 열린 한국식품유통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외국산 주요 과실에 대한 소비자 구매의향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김성훈 전문연구원은 12월 21일 한국식품연구원 강당에서 열린 한국농업경제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부분균형모형을 통한 미국유제품시장의 공익광고 효과 분석'이란 제목으로 발표했다.

덕천마을과 1사1촌 자매결연식 가져



연구원은 12월 13일 덕천마을과 자매결연식을 맺고, 다양한 교류를 갖기로 하였다.

연구원 농업관측정보센터는 12월 13일 전북 고창군 대산면 덕천마을에서 농촌사랑 1사1촌 자매결연식을 가졌다.

자매결연식에서 덕천마을 신종원 대표는 "최고의 농정연구기관과 한 가족이 되어 기쁘다"고 말하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마을이 발전할 수 있도록 이끌어 달라"고 당부했다. 김명환 농업관측정보센터장은 "덕천마을과 한 가족이

되었으니 자주 찾아와 함께 기쁨과 아픔을 나눌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덕천마을은 전복 고창에 위치한 청정지역으로 벼농사를 비롯 수박, 토마토 주산지로서 농업관측정보센터와 농업관측사업을 계기로 관계를 맺어 온 마을이다.

연구원은 이번 자매결연을 계기로 덕천마을에서 생산되는 친환경쌀을 비롯 황토랑 수박, 토마토 등 지역특산물을 팔아주고, 농사경영 컨설팅과 농촌 현장체험 등 다양한 교류를 가질 계획이다.

연구원은 강원도 화천 토고미마을에 이어 두 번째로 덕천마을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촌과 더욱 활발한 교류를 갖게 되었다.